



독일 · 프랑스, ECB 역할확대 이견 확인

김세중 선임연구원

■ 이탈리아, 스페인에 이어 프랑스의 국채금리도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유로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ECB의 역할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였으나, 독일 메르켈 총리측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

- 11월 17일 프랑스 재무부는 총 69억 8천만 유로 상당의 국채를 매각했으나 5년물 발행금리는 2.82%로 10월 달의 2.31%에 비해 크게 상승했으며, 10년 만기 프랑스 국채와 독일국채 간 스프레드는 2.00%p로 확대됨.
- 독일과 프랑스의 금리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등 프랑스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ECB 역할 확대와 관련한 프랑스의 요구가 강해지고 있으며,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ECB가 유로지역 위기 해결을 위해 전면에 나설 것을 촉구함.
- 그러나 메르켈 독일 총리는 프랑스의 제안을 거절하였으며, 유로존 핵심국가인 독일과 프랑스 정부가 ECB의 역할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됨.

■ 독일정부와 중앙은행은 ECB의 채권 매입이 이미 법적 한계에 다다랐다고 주장하면서 ECB의 역할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함.

- 독일 중앙은행 분데스뱅크 총재 옌스 바이트만은 ECB의 역할 확대가 1920년대와 같은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정부자금 조달(Monetary Financing)에 관한 EU의 금지 조항을 위반할 수 있다고 경고함.
- 또한 ECB의 역할 확대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ECB의 역할 확대를 1999년 독일이 유로존에 합류할 당시 기초로 삼았던 EU 조약의 기본 정신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간주하는 독일 국민들의 정서가 부담으로 작용함.
- 독일 경제장관 필립 뢰슬러는 두 번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경험한 독일이 확장적 통화정책에 기본적으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함.

- 한편 영국 데이비드 카메룬 총리도 독일 메르켈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ECB가 재정위기 국가들에 대해 최종대부자 기능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메르켈 총리는 반대의사를 나타냄.
- ECB 내부에서도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ECB의 역할 확대에 부정적인 반응이며, 재정감축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함.
 - ECB 드라기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데 있어 ECB가 신뢰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임무라고 밝히고 신뢰를 상실할 경우 신뢰회복에 많은 경제·사회적 비용이 초래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ECB의 역할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냄.
 - 또한 ECB의 역할 확대가 자칫 재정감축과 경제개혁을 실행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정치적인 부담으로 작용함.
 - 그러나 드라기는 유로존 내 부실화된 은행에 대한 추가지원을 고려중이라는 점을 내비쳤으며, 이 방안에는 2~3년간의 유동성 공급과 EBC로부터 자금 차입 시 요구되는 담보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임.
- 한편 ECB가 유통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며, 독일과 다른 유로존 국가의 국채 이자율 스프레드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제시됨.
 - 리차드 포르테스 런던비즈니스스쿨 교수는 ECB가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오히려 ECB의 불규칙한 개입 때문에 시장에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고 지적함.
 - 2010년 5월부터 시작된 ECB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은 ECB가 목적달성을 위해 정부로부터 직접 채권을 매입할 수는 없으나 공개시장에서 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조항에 근거함.
 - 또한 ECB의 가이드라인은 2주간 유로존 국채 매입규모를 200억 유로로 제한하고 있으나 가이드라인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독일과 다른 유로존 국가의 국채 이자율 스프레드 한도를 설정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제시됨.

(Financial Times 등, 11/18)